

[www.kef.or.kr](http://www.kef.or.kr)

2024

e경제 · 경영정책

리포트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Weekly Newsletter

## ◆ 경총,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10.9)

(경제분석팀 02-3270-7433)

\* 보도자료는 경총플라자(www.kefplaza.com)에 게시

- 경총이 발표한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경상지수)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대비 0.3%에 그침. 또한,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불변지수) 증가율은 -2.4%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는 면세점(13.6%), 무점포소매(7.7%)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2%), 전문소매점(-3.1%)은 감소했다.

※ 동 보고서는 통계청이 매월 「서비스업동향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는 소매판매액지수(경상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다만, 실질 소매판매 분석에서는 가격 변동을 제거한 불변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 ①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 현황)**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소매판매액(경상지수)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대비 0.3%에 그침. 상반기 기준 2021년과 2022년 각각 8.1%, 7.1% 늘던 소매판매가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3년(2.2%)과 2024년(0.3%)에는 점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② **(실질 소매판매 현황)**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2.4%로 나타남. 이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음의 값인 것은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의미.

\*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가격 변동을 제거한 지표로서,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4.3).

\*\* '96년 이후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음(-)의 값을 가졌던 시기는 '98년(-16.6%), '03년(-2.4%), '24년(-2.4%), '09년(-1.4%), '23년(-0.8%), '20년(-0.3%) 順으로 나타남.

- ③ **(품목별 소매판매 현황)**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기타 내구재\*(10.3%)와 가구(8.7%), 의약품(5.1%)이 높았고, 승용차(-8.1%)와 오락·취미·경기용품(-5.3%), 기타준내구재\*\*(-3.6%)가 낮게 나타나 품목별로 차이를 보임.

\* 기타 내구재 : 전기용품, 난방기기, 전동공구 등

\*\* 기타 준내구재 : 침구류, 철물·건축자재류, 주방용품 등

- **(최근 5년간 품목별 소매판매 변화)** '19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누적 증가율은 기타내구재\*(45.2%), 의약품(42.4%), 승용차(31.4%)가 높았고 신발 및 가방

(1.2%), 통신기기 및 컴퓨터(2.6%), 가전제품(3.0%)은 낮았다. 화장품은 -9.5%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 기타비내구재 : 담배, 신문, 화장지 등

- ④ **(업태별 소매판매 현황)** 업태별로는, 면세점(13.6%)에서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이는 최근 면세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영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으로 추정. 인터넷쇼핑 같은 무점포소매(7.7%)와 대형마트(5.2%) 역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2%), 전문소매점(-3.1%), 슈퍼마켓 및 잡화점(-1.9%)은 작년 상반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⑤ **(무점포소매 판매 품목의 업태별 소매판매 현황)** 올해 상반기 무점포소매로 판매되는 품목을 살펴본 결과, 총 9개의 품목 중 음식료품을 비롯한 5개 품목\*의 무점포소매 판매 증가율이 다른 업태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음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 및 컴퓨터, 의복

문의 : 경제분석팀(02-3270-7376)

## < contents >

- ▶ 통계청,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9.30)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10.1)
- ▶ 통계청,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0.2)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10.2)
- ▶ 한국은행,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8)
- ▶ 고용노동부,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9.30)

### ◆ 통계청,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9.30)

- **(생산)** 2024년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4.1%), 서비스업(0.2%)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1.4(\*24.4)→ △0.8(5)→ △0.1(6)→ △0.6(7)→ 1.2(8)
  -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22.7%), 반도체(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4.1% 증가(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4.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3.0%), 숙박·음식점(4.4%)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4년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대비 3.2%p 상승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3.8(\*24.4)→ 72.9(5)→ 73.8(6)→ 71.1(7)→ 74.3(8)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8월 제조업 재고율은 110.5%로 전월대비 4.6%p 하락(전년동월대비 8.3%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09.8(\*24.4)→ 110.6(5)→ 104.7(6)→ 115.1(7)→ 110.5(8)



- **(소매판매)** 2024년 8월 소매판매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Delta 0.9\%$ )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2.7\%$ ), 승용차 등 내구재( $1.2\%$ )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7\%$  증가\*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 소매판매의 전월대비 증가 폭은 2023년 2월( $4.0\%$ ) 이후 1년 6개월만에 최대치

- **(설비투자)** 2024년 8월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Delta 15.4\%$ ) 및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4\%$  감소(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건설투자)** 2024년 8월 건설투자는 토목( $2.4\%$ )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 $\Delta 2.4\%$ )에서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전년동월대비  $9.0\%$  감소\*)

\* 건설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4년 5월( $\Delta 3.2\%$ )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0.6(24.4) \rightarrow \Delta 3.2(5) \rightarrow \Delta 6.0(6) \rightarrow \Delta 5.2(7) \rightarrow \Delta 9.0(8)$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 (전월대비  $0.1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 (전월대비  $0.1p$  하락) 기록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10.1)

- **(총괄)** 2024년 9월 수출은  $587.7$ 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했으며, 수입은  $521.2$ 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 $4.9\%$ )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1.4(24.5) \rightarrow 5.6(6) \rightarrow 13.5(7) \rightarrow 11.2(8) \rightarrow 7.5(9)$

- 9월 무역수지는  $66.6$ 억 달러 흑자를 기록(16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48.6(24.5) \rightarrow 82.9(6) \rightarrow 34.3(7) \rightarrow 37.7(8) \rightarrow 66.6(9)$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 중 컴퓨터, 선박, 반도체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 2024년 9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컴퓨터)  $132.0$ , (선박)  $76.2$ , (반도체\*)  $37.1$ , (무선통신)  $19.0$ , (바이오헬스)  $9.9$ , (자동차)  $4.9$ , (석유화학)  $\Delta 0.6$ , (섬유)  $\Delta 2.8$ , (철강)  $\Delta 3.9$ , (디스플레이)  $\Delta 4.3$ , (자동차부품)  $\Delta 6.6$ , (이차전지)  $\Delta 11.8$ , (일반기계)  $\Delta 13.3$ , (가전)  $\Delta 13.9$ , (석유제품)  $\Delta 17.8$

\* 9월 반도체 수출은  $136.2$ 억 달러를 기록하여, '23.11월( $12.9\%$ )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54.4(24.5) \rightarrow 50.9(6) \rightarrow 50.2(7) \rightarrow 38.8(8) \rightarrow 37.1(9)$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 중 對인도( $\Delta 10.0\%$ ), 對중남미( $\Delta 5.7\%$ ), 對일본( $\Delta 0.8\%$ ) 수출은 감소한 반면, 對중동( $15.5\%$ ), 對CIS( $8.2\%$ ), 對중국( $6.3\%$ )\*, 對EU( $5.1\%$ ), 對미국( $3.4\%$ )\*\* , 對아세안( $0.6\%$ ) 수출은 증가

\* 對중국 수출은 '24.3월( $0.4\%$ ) 이후 7개월 연속 증가

\*\* 對미국 수출은 '23.8월( $2.4\%$ )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 ◆ 통계청,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0.2)

○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는 '21년 2월(1.4%) 이후 3년 7개월만에 최저치이며,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한 것은 '21년 3월(1.9%) 이후 처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2.7('24.5)→ 2.4(6)→ 2.6(7)→ 2.0(8)→ 1.6(9)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교통( $\Delta$ 1.2%)을 제외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 음식 및 숙박(2.6%), 의류 및 신발(2.5%) 등 11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3.0%)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2.9%)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2024년 9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10.2)

○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4.4억달러로 전년동기(57.5억달러)대비 40.2% 감소

○ 2024년 1~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104.9억달러로 전년동기(144.0억달러)대비 27.2% 감소 (도착 기준)

- 2024년 1~3분기 누적 기준 제조업 FDI 규모는 3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1%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63.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2% 감소

○ 국가별로는 일본, 중화권\* 등에서 FDI가 증가, 미국, EU\*\* 등에서는 FDI가 감소(도착 기준)

\* 중국, 홍콩, 대만

\*\*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 2024년 1~3분기(누적) 일본에서 유입된 FDI는 11.3억달러(전년동기대비 73.1% 증가), 중화권에서 유입된 FDI는 10.4억달러(29.0% 증가)를 기록. 반면, 미국에서 유입된 FDI는 14.7억달러(전년동기대비  $\Delta$ 4.8%), EU에서 유입된 FDI는 38.9억달러( $\Delta$ 6.6%)를 기록

○ 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 FDI가 58.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6% 감소했고, M&A형 FDI는 46.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도착 기준)

## ◆ 한국은행,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8)

○ 2024년 8월 경상수지는 6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54.1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11.9억달러 확대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  $\Delta 2.9(24.4) \rightarrow 89.2(5) \rightarrow 125.6(6) \rightarrow 89.7(7) \rightarrow 66.0(8)$
- 상품수지는 65.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52.0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 상품수지는 '23년 4월(6.1억달러 흑자)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 상품수지 추이(억달러) :  $51.1(24.4) \rightarrow 87.5(5) \rightarrow 117.4(6) \rightarrow 83.3(7) \rightarrow 65.9(8)$
- 서비스수지는 12.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5.5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2.8억달러 적자) 이후 28개월 연속 적자 기록
  -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  $\Delta 16.6(24.4) \rightarrow \Delta 12.9(5) \rightarrow \Delta 16.0(6) \rightarrow \Delta 23.8(7) \rightarrow \Delta 12.3(8)$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6.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8.8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
- 이전소득수지는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2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4년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53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 1~8월 누적(106.7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429.3억달러 확대
- 2024년 8월 금융계정은 49.3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 고용노동부,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9.30)

### < 고용 부문('24.8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11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5천명(0.6%)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
- **(임·이직)** 입직자는 9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이고, 이직자는 95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1.7%) 증가

### < 근로실태 부문('24.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25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원(7.4%) 증가
  - ※ '24년 7월 명목 임금 총액 증가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2시간(6.4%) 증가
  - ※ '24년 7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21일→23일)

문의 : 노사협력팀(02-3270-7417)

## < contents >

- ▶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공감한 가운데 경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활동 강화
- ▶ 환노위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 연대, 장외투쟁 등으로 현안 이슈화에 주력
- ▶ 정부와 여당은 임금체불 근절 및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
- ▶ 하반기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 주요 완성차사 2024 임단협 마무리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공감한 가운데 경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활동 강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 주요 참석자 :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 경사노위는 현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하며 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②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① 사업장 점거 금지, ② 대체근로 하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



○ 한편, 경총은 10. 10 「노동개혁 추진단(단장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간담회 개최

※ 경총은 지난 6. 9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
- 「노동개혁 추진단」은 향후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예정

◆ **환노위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 연대, 장외투쟁 등으로 현안 이슈화에 주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는 10. 8부터 10. 25까지 진행될 예정

※ 환노위 국정감사 일정 : 고용부(10. 10), 경사노위 등(10. 15), 고용부 종합(10. 25)

- 금번 환노위 국정감사에는 산업재해, 임금채불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기업 경영진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

○ 양 노총은 11. 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노조법 제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이슈화한다는 계획

- 한국노총은 11. 9 승례문 일대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사회연대입법\* 관철, ▲정년 65세 연장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예정

\* 사회연대입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 민주노총은 11. 9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며, 민주노총 집행부는 10. 11부터 현장순회를 통해 투쟁 분위기 조성해 주력

○ 한편, 민주노총은 10. 4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오티칼하이테크 등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주요 입법 요구사항을 전달

\*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의원)는 2013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기구

## ◆ 정부와 여당은 임금체불 근절 및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

○ 고용부는 10. 7 임금체불 집중 지도(8. 26 ~ 9. 13) 결과 발표

- 고용부는 4,7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근로감독을 진행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하고,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도 강화
-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투입한다고 강조한 만큼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

○ 한편,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10. 4 ‘노동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이자 의원)를 발족하고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등 논의

- \*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는 여당 의원(9명) 및 학계 중심의 민간위원(4명)으로 구성
- \* 여당은 우리나라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
- 정부·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① ‘노동약자 지원위원회’ 설립, ② 표준계약서 마련, ③ 취업촉진 등 지원, ④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를 검토

## ◆ 하반기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하반기 국립대병원, 철도, 지하철 분야의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노정교섭 성사 등을 요구하며 시기 집중 투쟁 예고
  - ※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시기 집중 투쟁 일정 : 집단 조정신청(10월 초·중순) → 공동파업 돌입 대회(11. 21, 서울 도심), 공동투쟁의 날(11. 23, 국회 앞)
- 서울대병원 등 주요 국립대병원 지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 8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면담 거부시 10. 17부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발표
  - 의료연대 본부 주요 요구사항 : ▲임금 인상, ▲인력충원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이사제 도입
- 철도노조는 9. 27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 철도노조 2024년 임금교섭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6.6% 인상, ▲성과보상 임금체계 반대

-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2024 임단협 교섭 난항이 지속되고 있고, 부산교통공사노조는 10. 10 교섭 결렬시 파업 돌입 예고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기본급 6.6% 인상, ▲가족수당 인상 등을 요구
- 부산교통공사노조는 ▲기본급 4.8% 인상, ▲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 등 요구

## ◆ 주요 완성차사 2024 임단협 마무리

- 기아차 노사가 10. 2 2024년 단협에 합의한 가운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0. 8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63.1% 찬성으로 단체협약 합의안을 가결시킴
- ※ 기아차 노조는 지난 9. 12 임금과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 별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임금 합의안① 기본급 112,000원 인상, ② 성과금 500% + 1,780만원 지급 등에 대해 조합원 53.8% 찬성으로 가결시켰지만,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 51.7% 반대로 부결시킴.
-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 합의안에는 ① 경조휴가 확대(자녀 출산시 : 10일 → 20일), ② 단체상해보험 보상 한도 확대 등이 포함
- 르노코리아는 노조가 9. 11부터 파업을 강행하고 이에 따른 회사의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등 2024년 임단협 관련 갈등을 겪었으나, 10. 9 임단협 합의
- ※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추가 제시안,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9. 23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나, 회사의 직장폐쇄 철회 및 임단협 교섭 재개를 이유로 단식 중단
- ※ 르노코리아 노조는 10. 11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예정
- 르노코리아 노사는 ① 기본급 80,000원 인상, ② 일사금 300만원 지급 등에 합의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고용노동부 발표,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 ※ 협약임금 인상률\*은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7,165개를 대상으로 집계, 2023년도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는 6,869개(95.9%)
- \* 노사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정액급여, 고정상여금 기준) 인상률
- ※ 2023년 연간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잠정치)
  - (전체) 4.2%, 전년 4.7% 대비 0.5%p 하락
  - (규모별) 100~299인 4.6% (전년 5.0%), 300인 이상 4.6% (전년 4.7%)
  - \* 1,000인 이상 4.1% (전년 4.4%)

## 〈 개별기업 임금교섭 타결현황 〉

(2024. 10. 10 현재)

번호	업 체 명	업종	일시	상급단체	내 용
32	기아	제조	10.10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li> <li>· 경영성과금(기본급의 300%+1,000만원) 지급</li> <li>·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기본급의 100%+280만원) 지급</li> <li>· 특별성과격려금(기본급의 100%+500만원) 지급</li> <li>·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li> </ul>
31	삼성중공업	제조	9.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노사협의체 합의</li> <li>· 기본급 12만 1,526원 인상(정기승급분 포함)</li> <li>·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li> </ul>
30	HD현대건설기계	제조	9.12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 5,000원 포함)</li> <li>· 성과급[영업이익 1%당 85% x 전년대비 매출 증감율(10%한도)] 지급 등</li> </ul>
29	SK하이닉스	제조	9.11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협 타결 (기술사무직 노조)</li> <li>· 임금 5.7% 인상 등</li> </ul>
28	금호타이어	제조	9.10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기본급 3% 인상</li> <li>· 격려금 500만원 지급 등</li> </ul>
27	한국GM	제조	9.4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li> <li>· 일시금 및 성과급 총 1,550만원 지급</li> <li>· 설·추석 귀성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등</li> </ul>
26	KG모빌리티	제조	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협 타결</li> <li>·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li> <li>· 생산 장려금(PI) 250만원 및 이익 분배금(PS) 100만원 지급 등</li> </ul>
25	삼성전기	제조	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평균 임금 5.1% 인상(기본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 등</li> </ul>
24	고려아연	제조	7.30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협 타결</li> <li>· 기본급 평균 13만 9,000원 인상(승급분 포함)</li> <li>· 노사화합 격려금 190만원 지급</li> <li>· 원가절감 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li> </ul>
23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7.15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임단협 타결 (일반노조)</li> <li>· 기본급 7.5% 인상</li> <li>· 안전장려금(기본급의 100%) 지급 등</li> </ul>
22	현대자동차	제조	7.15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기본급 4.65% 인상(11만 2,000원 인상, 호봉승급분 포함)</li> <li>· 경영성과금(기본급의 400%+1,000만원) 지급</li> <li>· 경영실적 달성 기념 격려금(100%+280만원) 지급</li> <li>·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li> <li>· 주식 5주 지급 등</li> </ul>
21	현대모비스	제조	7.12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li> <li>·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지급</li> <li>· 핵심 경영 목표 달성 격려금 (100%+주식 11주) 지급</li> <li>· 글로벌 수주 확대 격려금 500만원+주식 20주 지급 등</li> </ul>

20	삼성증권	서비스	7.10	민주노총 (2개 노조 개별교섭)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4.9% 인상 등
19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조	7.3	-	▶ ('24년) 건설부문 임단협 타결 · 기본 인상분(Base-up) 평균 3.0% 등
18	엔씨소프트	서비스	6.19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평균 연봉 350만원 인상(A등급 이상자는 연봉 최 저 150만원 인상 보장) · 일시금 50만원 지급 등
17	LG이노텍	제조	6.5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평균 임금인상을 미발표 · 현장 직급 중 사원, 기사 초임급 인상(기본급 기준 사 원 3,164만원, 기사 3,468만원) · 복지포인트 상향(연간 100만원→140만원) 등
16	대한항공	서비스	5.14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일반노조) · 기본급 3.4% 인상 · 임금피크제 앞둔 직원 대상 조기 전직 지원제도 운영 ·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한도 상향(최대 6000만원 →최대1억원) 등
15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5.8	민주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조종사노조) · 기본급, 비행수당 각각 7.5% 인상 · 안전장려금(기본급의 100%) 지급 등
14	현대제철	제조	3.26 3.27 4.11 4.22	민주노총	▶ ('23년) 임협 타결 · 기본급 10만 4,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 성과금 400%+1,35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0만원 포함) 지급 등 ※ 타결 일시는 3.26(광전지부), 3.27(인천지부, 포항지 부), 4.11(충남지부 당진하이스코지회), 4.22(충남지 부 현대제철지회) 順
13	삼성E&A	제조	4.23	한국노총	▶ ('24년) 임협 타결 · 임금 평균 5.0% 인상(공통인상률 3.0%+평균 성과 인상률 2.0%) · 식대 인상(월 18만원→20만원) · 간부급 임금 구간(pay-zone) 조정 · 15년·25년 장기근속 직원 대상 휴가(각각 3일·7일)와 휴가비(각각 100만원·200만원) 혜택 복구 등
12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조	4.18	-	▶ ('23년) 임단협 타결 · 임금 평균 4.1% 인상(기본인상률 2.0%+성과인 상률 2.1%) ▶ ('24년) 임협 타결 · 임금 평균 5.3% 인상(기본인상률 3.2%+성과 인상률 2.1%)
11	삼성SDI	제조	4.16	-	▶ ('24년) 노사협의회 합의 · 임금 평균 5.1% 인상(기본인상률 3%+성과 인상률 2.1%) · 임직원 사기 진작 특별포인트 50만원 지급 등
10	삼성디스플레이	제조	4.16	-	▶ ('24년) 임협 타결 · 임금 평균 5.1% 인상(기본인상률 3%+성과 인상률 2.1%)
9	LG디스플레이	제조	4.9	한국노총	▶ ('24년) 임협 타결 · 임금 평균 2.4% 인상(기본인상률 1.8%+고과별 평균 인상률 0.6%)



8	LG전자	제조	4.9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임금 평균 5.2% 인상</li> <li>· 직급별 초임 100만원 인상</li> <li>· 난임치료 유급휴가 연장(3일→6일)</li> <li>·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 등</li> </ul>
7	삼성전자	제조	3.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노사협의회 합의</li> <li>· 임금 평균 5.1% 인상(기본 인상을 3.0%+성과 인상을 2.1%)</li> <li>· 배우자 출산휴가(15일) 분할 사용 횟수 확대(2회→3회)</li> <li>· 난임휴가 연장(5일→6일)</li> <li>·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기간 확대(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li> <li>· 장기근속 휴가 확대(10년 4일, 20·30년 각 8일→10년, 20년, 30년 모두 10일)</li> </ul>
6	우리카드	서비스	3.29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임단협 타결</li> <li>· 임금 총액 2% 인상</li> <li>· 특별보로금(성과급) 115% 지급</li> <li>· 사기진작금 100만원 지급</li> <li>· 본인 결혼 축하금 인상(100만→150만원)</li> <li>· 남성 직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2년) 등</li> </ul>
5	홈플러스	서비스	3.28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임단협 타결</li> <li>· 선임~매니저 직급 임금 3.3% 인상</li> <li>· 조리 근무자 저선량 폐CT 지원제도 도입 등</li> </ul>
4	KB손해보험	서비스	3.5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임단협 타결</li> <li>· 4급 이상 직원과 5·6급·직무급제 각각 기본급 5.0%, 6.0% 인상</li> <li>· 성과급 월상여금의 450%(연봉의 18.5%) 지급</li> <li>· 목표달성격려금 360만원(월상여금의 100%) 지급</li> <li>· 복지포인트 180만 포인트(월상여금의 50%) 지급 등</li> </ul>
3	하나은행	서비스	1.19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임단협 타결</li> <li>· 임금 2.0% 인상</li> <li>· 이익연동 특별성과급(기본급의 280%) 지급 등</li> </ul>
2	우리은행	서비스	1.10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임단협 타결</li> <li>· 임금 2.0% 인상</li> <li>· 사기진작 명목 일시금 200만원 지급</li> <li>· 개인연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10만원→20만원)</li> <li>· 본인 결혼 축하금 150만원 지급 등</li> </ul>
1	KB국민은행	서비스	1.5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임단협 타결</li> <li>· 임금 2.0% 인상</li> <li>· 성과급 230% 지급 등</li> </ul>

문의 : 노사관계법제팀(02-3270-7321), 의정협력팀(02-3270-7382)

## < contents >

### ○ 법안동향

- ▶ [2204289]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민), 9.25)
- ▶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민), 9.26)
- ▶ [22044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민), 9.30)
- ▶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민), 10.2)
- ▶ [2204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민), 9.30)
- ▶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민), 10.7)
- ▶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민), 9.30)
- ▶ [22044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 10.2)
- ▶ [2204579]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10.7) 등 11개 법안
- ▶ [2204561]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0.4)
- ▶ [220459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7)
- ▶ [2204598]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7)
- ▶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7)
- ▶ [220460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8)
- ▶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8)
- ▶ [2204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10.8)

### ○ 국회동향

- ▶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출범(10.4)
- ▶ 국정감사 진행(10.7 ~ 10.25)

## ○ 판례동향

-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 ○ 법안동향

### ◆ [2204289]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민), 9.25)

- (발의 이유)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법제화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국가가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정책 수립·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등

### ◆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민), 9.26)

- (발의 이유)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로 변경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도록 의무 부여
- ▶ 유사취지 법안 : [22044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민), 9.30),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민), 10.2)
-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변경하고, 이사가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

◆ [2204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민), 9.30)

- (발의 이유)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및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①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계약'까지 확대하고,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을 발주자·도급인·수급인이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①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업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  
③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

▶ 유사취지 법안 :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민), 10.7)

- (주요 내용)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의무 부여

◆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민), 9.30)

- (발의 이유) 상장기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이사선출 등의 지배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총회 개최 방식을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자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규정  
②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도록 의무 부여

- ③ ‘사와이사’ → ‘독립이사’로 용어 변경
- ④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임하도록 규정
- ⑤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 ⑥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보유한 자가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음’을 명시

◆ [22044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 10.2)

- (발의 이유)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업 종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고, 사업 종류별·지역별 격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 [2204579]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10.7)

※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도 함께 발의

- (발의 이유)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를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5조),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제18조)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가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기관의 개별 설립 근거법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를 이사에 포함할 것을 규정할 필요
- (주요 내용)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15인을 초과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  
 ②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포함

- ▶ 유사취지 법안 :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박해철 의원(민), 10.4)  
 [2204583]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강득구 의원(민), 10.7)



◆ [2204561]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0.4)

- (발의 이유) 청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연장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법정 장년을 現 '60세' →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 2027년까지 63세 / 2032년까지 64세 / 2033년부터 65세

◆ [220459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7)

- (발의 이유) 현행법(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정약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

◆ [2204598]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7)

- (발의 이유) 현행법(파견법 제20조)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파견계약 체결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액 및 산장기준·파견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임금액 및 산장기준, 사용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 ②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
  - ③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 등

◆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7)

- (발의 이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② ‘동일가치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자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i)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 ii)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대체가능성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③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반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며, 대신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 [220460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8)

- (발의 이유) 현행법(산재보험법 제124조)은 중소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 자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 ◆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8)

- (발의 이유) 도급 사업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수급인에게 비용 지급 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②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도급인에게 의무 부여

▶ 유사취지 법안 : [2204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10.8)

### ○ 국회동향

#### ◆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출범(10.4)

- 국민의힘은 노동약자 보호·고령화 시대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동전환특위를 출범하고, 향후 노동약자 지원 법안, 플랫폼 종사자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발표

※ 임이자 의원(위원장), 김형동 의원 등 의원 9명 참여

◆ 국정감사 진행(10.7 ~ 10.25)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구분	일 자	일 정
환노위	10. 10(목)	• 고용노동부
	10. 15(화)	•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10. 22(화)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0. 25(금)	•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감사
산자위	10. 14(월)	• 한국전력공사 등
	10. 22(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 24(목)	• 산업부 등 종합감사
	10. 25(금)	•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감사
정무위	10. 17(목)	• 금융감독원 등
	10. 21(월)	• 공정거래위원회 등
	10. 24(목)	•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
	10. 25(금)	• 공정거래위원회 등 종합감사

## ○ 판례동향

###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리운전 기사들이 다른 업체의 콜을 수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에 대한 소득 의존성이 인정되고, 회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기사들은 콜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방식·복장·교육 등에 있어서 회사의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p><b>사실관계</b></p>	<p>○ A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기사ID를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동업계약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갑의 책임과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갑은 을의 대고객 서비스 정진 고양을 위하여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li> </ul> </li> <li>• 제4조(을의 책임과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매뉴얼 및 대고객 10대 금지사항(고객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li> <li>⑤ 을은 갑이 시행하는 정책, 규칙, 업무지시 및 정기 및 비정기 교육을 반드시 참가, 이행하여야 한다.</li> <li>⑦ 을은 대리운전 배차시스템에 필요한 단말기(PDA)를 준비하여야 하며, 출근은 자유며 출근 시 프로그램비 500원, 관리비 3000원을 선납하여야 한다.</li> </ul> </li> <li>• 제6조(영업시간과 휴일)               <p>영업시간은 갑과 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상호 제약을 받지 않는다.</p> </li> <li>• 제7조(계약의 해지)               <p>갑과 을은 상호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li> <li>• 제9조(계약의 기간)               <p>본 계약의 기간은 전적으로 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p> </li> </ul> </div> <p>○ B는 대리 기사를 조합원으로 한 지역단위노조인 C노조에 가입하였고, C노조는 2019. 1. 14.경과 2019. 2. 1.경에 걸쳐 A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사는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음.</p> <p>○ A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p> <p>○ (원심) 대리운전 기사들의 주된 소득이 대리 운전비이고, 회사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으며, 근무형태와 수수료 등의 변경 권한이 회사에만 있었음을 근거로 대리운전 기사들이 회사와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함.</p>
--------------------	--

판결요지	<p>■ 관련 법리</p> <div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b>        (※ 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li> </ul>
	<p>■ 판결 요지</p> <p>○ B가 A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적극)</p> <p>① (B가 소득을 A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지) B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A사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B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B가 A사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A사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A사의 결정 여하에 따라 B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B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A사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② (A사가 B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A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A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요금에서 A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은 A사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B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⑤항에서 보는 것처럼 B는 배정받은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B의 보수 역시 A사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함.</p> <p>③ (B가 A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A사의 사업</p>



	<p>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B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A사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B는 A사를 통해서 대리운전 영업시장에 접근하며 A사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p> <p>④ (B와 A사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B는 2017. 10. 31. A사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A사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①항에서 본 것처럼 A사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함.</p> <p>⑤ (A사와 B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A사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년 1월 무렵 중단되었음)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고, B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A사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임.</p> <p>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B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음(2020년 1월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실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p> <p>⑥ (B가 A사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B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A사라고 보아야 하고, 대리운전 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A사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결제한 후 B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며,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B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요금이 A사에게 귀속된 후 A사가 대리운전비를 B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음.</p>
<p><b>시사점</b></p>	<p>○ 금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이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회사의 복장 규정 등을 위반할 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회사와의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라고 본바,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p> <p>○ 금번 판결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하였으나, 금번 사안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특성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p>

	<p>자에게 일괄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p> <p>※ 대리운전 플랫폼 취업 배경은 출퇴근시간 자율성(22.2%), 타 직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21.6%) 순임.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대리운전자 실태」)</p> <p>○ 최근 법원이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정수기 코디 등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업무수행 관련 규정이나 규칙 등 회사의 제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p>
--	---